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

팩스 02-3480-2704



보도자료
2024. 11. 27. (수)

자료문의 :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
전화번호 : 02-3480-2190
주책임자 :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

제목

「기술유출 韓·美 라운드테이블(제2차)」 개최

- 한·미 양국의 기술보호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대검찰청, 관세청, 경찰청, 특허청, 해양경찰청은 2024. 11. 26.(화)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과 기술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「기술유출 韓·美 라운드테이블(제2차)」 회의를 개최함

※ 기술유출 한·미 라운드테이블은 한국의 수사기관 및 미국의 연방수사국(FBI), 상무부 소속 산업안전국(BIS), 국토안보조사국(HSI)이 참여, 기술유출 관련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하였고, 1차 회의는 '24. 4. 4. 개최됨

- 제2차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한·미는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▲ 기술유출 수사사례 및 범죄 정보 공유, ▲ 양국 간 증거의 상호 활용 방안 등 효율적인 수사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음

< 주요 발표 사례 >

- ▲ (한국) S社 전직 부사장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NPE(Non Practicing Entity, 특허관리 기업)를 설립, S社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,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하는 등 한국 수사기관의 증거를 채택하여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한 사례
- ▲ (미국)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국제적 협업 필요성 강조

-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·외 기술유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·협력하여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

I 기술유출 韓·美 라운드테이블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4. 11. 26.(화) 15:30,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
※ 미국 FBI 및 한국 발표자 김대철 검사는 미국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
- (참석기관)
 - 韓 : 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특허청·해양경찰청
 - 美 : 연방수사국(FBI)·산업보안국(BIS)·국토안보수사국(HSI)

II 개최 배경 및 추진경과

- (국외 기술유출범죄 증가)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등 국가핵심기술·영업비밀에 대한 국외유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※ 국가첨단전략산업 :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
 - 최근 7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그 중 약 29.3%인 41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임

< 산업기술 국외 유출 실태 >

※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
기술유출(건)	24	20	14	17	22	20	23	140
국가핵심기술(건)	3	5	5	9	10	4	5	41

- (제1차 韓·美 라운드테이블 구성) 검찰은 미국 FBI 등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,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, '24. 4. 4. 제1차 기술유출 한·미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
 - ※ 참석기관 : 한국(대검, 관세청, 경찰청, 특허청), 미국(FBI, BIS, HSI)
 -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양국 수사사례 공유 및 기관별 협업 가능한 분야 논의
 - 정기적으로 라운드테이블 개최하여 양국 수사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합의

III

제2차 韓·美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

가. 한국 기술유출 수사사례 공유

- 검찰은 불법취득한 피해회사 S社의 기밀정보로 NPE를 설립한 뒤, 1천억 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미국에서 S社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前 S社 부사장 등 6명을 기소한 사례 발표
-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미국 연방규칙상 공공 기록(public records)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, 특신상태(trustworthy) 또한 인정된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원고(NPE) 패소 판결을 선고
- 한국 검사가 수사하여 확보한 증거가 미국 사법 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, 향후에도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있어 공조 수사, 사법공조 등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

나. 미국 기술유출 사례 정보 공유

- 미국 FBI는 전략물자의 불법적인 조달, 수출 등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, 국제적 협업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

다. 기타 논의사항

- 미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수사 협조 방안
 - 한·미 양국에 관할권 있는 범죄의 경우,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ISP로부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조 수사 방안 등 논의

IV

汎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활동

- '23. 11. 대통령실 주재 「汎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」 출범
 -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·수사 기관 참여, 국제공조, 법집행, 정책·제도 3개 분과 체제로 운영
- 대검찰청은 법집행분과 주관기관으로, '24. 11. 26. 13:30 관세청·경찰청·특허청·해양경찰청과 제3회 법집행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유출범죄 대응 현황,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함

[법집행 분과 회의 주요내용]

참가기관	기술유출범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
대검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5. 유관기관(관세청, 경찰청, 특허청, 해경) 기술유출 전문 교육 예정 · 기술유출 전문인력 보강 공동추진
관세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재권 범위 확장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경단계에서 침해물품 차단
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위장수사 등 특수 수사기법 연구 및 공유
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방첩에 활용 가능한 첩보 공유 · 합동대응단 사건에 대한 특허청 기술자문 체계 구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비밀 성립 여부 및 기술유사성 판단 등
해양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청별 관내 조선·해양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 ·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보안관리교육 및 위탁 교육 시행

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내·외 기술유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【부서별 담당자 연락처】

담당 부서 (총괄)	대검찰청 사이버·기술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지연	(02-3480-2190)
		담당자	사무관	홍훈모	(02-3480-2976)
담당 부서 (공동)	관세청 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광우	(042-481-7910)
		담당자	주무관	고영민	(042-481-7614)
담당 부서 (공동)	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	책임자	과 장	김산호	(02-3150-2092)
		담당자	경 정	박성규	(02-3150-2725)
담당 부서 (공동)	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재석	(042-481-5213)
		담당자	사무관	정우열	(042-481-1675)
담당 부서 (공동)	해양경찰청 외사과	책임자	과 장	장윤석	(032-835-2068)
		담당자	경 위	조민국	(032-835-2368)

【회의 사진】

